

IJS JAPAN REVIEW



한일관계의 ‘불만’과 ‘불안’ 해소를 모색한다

박성빈 |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정책연구센터장

한일관계의 ‘불만’과 ‘불안’ 해소를 모색한다

강제징용 판결과 최악의 한일관계

한일관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일본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였다. 일본에서는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동 협정에도 강제징용 등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징용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는데, 일본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는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독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는 강제징용문제가 일본의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성이 깊다.

2018년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가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서는 ‘노 재팬’ 운동이 확대되면서, 일본기업 제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을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한일관계 개선

‘최악의 상황’이었던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일관계의 개선을 주도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 이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고, 판매량이 급감했던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일본 위스키 수입액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올해 일본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로서는 역시 한국이 등극했다.

올해 초만 해도 일본 측 정부·기업관계자, 전문가 등을 만날 때에는 왠지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대방이 필자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서로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측 인사와 만날 때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필자 또한 최근 일본지역전문가로서 한일관계가 좋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의 개선은 여론 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게론NPO’가 공동 실시한 2023년 연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양국 관계가 ‘나쁘다’라고 답한 한국인은 64.6%에서 42%로 급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 당시에는 ‘나쁘다’라고 답한 비율은 88.4%였는데, 3년 만에 동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에서는 양국 관계가 ‘나쁘다’라고 평가한 일본인은 2022년 39.7%에서 2023년 21.2%로 급감했다. 즉, 한일 국민 모두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불안’, 한국의 ‘불만’

그런데,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본은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이유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후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느끼고 있는 ‘불안’은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기존 일본의 시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거의 ‘양보’나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존재한다. 한국 입장에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일본의 상응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 이후 일본은 한

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였다. 또한, 2030 세계박람회(EXPO 유치 과정에서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한국을 공개 지지한 것도 한일관계 개선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단, 한국의 2030 세계박람회(EXPO 유치 실패로 이러한 점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2023년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되었다. 한일은 2001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래로 그 이후 무조건적으로 기한을 연장했고, 2012년경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통화스와프는 연장되지 않았고, 2015년 2월에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런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올해 12월에 8년 만에 양국 통화스와프가 재개된 것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에 100만 달러 이내로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상호 간의 협약이지만, 엔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와 무제한·무기한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 조치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외화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협업체’ 수준으로 높일 것을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이루어졌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는 한미일 3개국 간의 안보·경제협력의 강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물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종종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일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일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확대되고 있다.

‘불안’과 ‘불만’ 해소를 통한 한일관계의 발전

그렇다면,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대응의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즉, 일본의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일본의 한일협력에 대한 자세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불만’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 서로가 상대국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한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 중의 하나는 정권교체 이후에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친중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 하에서 일본은 한국의 친중적 성향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므로, 한국이 보다 대중 관계를 중시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도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역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높다. 종종 일본은 미중전략경쟁 하에서 미국의 대중전략(디커플링, 중국 봉쇄 등을 추종하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대중전략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고, 일본 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해외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이다. 한중일 협력 강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면서도 역내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일본의 ‘불안’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만’은 한국이 과거 한일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전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청구권 자금에 의해 복원되었고, 한국의 1990년대 외환위기나 그 이후 외화유동성 확충에 대해 일본은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한국을 지원했다. 또한,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를 전제로 한국은 일본으로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구조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한일 양국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관계가 강하게 의식되었다. 즉,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일협력에 대한 이미지는 한일격차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한일관계가 개선되어도 한일 간에는 협력적 관계보다 경쟁적 관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호적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더 이상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사실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협력이어야 한다. 즉, 경쟁을 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바람직한 협력 모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대책 마련이나, 제3국 시장 진출 협력, 수소·디지털 협력, 관광, 공급망 문제, 에너지 문제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일본에서도 종종 한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대중전략 및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 일본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일본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우선에서 전략적·경제적 이익의 공유로

기존에는 한일 간에 정치적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일 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단,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존에 한일 간의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졌다고보다는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역사문제 해결 등을 뒤로 미루거나, 역사문제 등에 의한 정치외교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해 왔다.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고 양국 간 경쟁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한국에는 기존처럼 한일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된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 양국이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양국 간 경제교류의 침체가 한일 양국에게 적지 않은 외교안보적·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것을 최근 경험을 통해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에 한일관계에서 중시되는 정경분리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최근 미중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갈등, 공급망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정책 사고가 각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외교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경제사회 협력을 추진하자고 하는 사고 자체가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최근의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은 국가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양쪽 측면에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양국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양국은 협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협력의 이익이 명확하게 있다고 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양국 간 협력은 증진되지 못할 것이다.

한일 양자협력에서 다자협력으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한일 양자가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인도태평양 지역 등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국제사회의 문제는 한일 양국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추 국가로서 디지털화나 탈탄소, 공급망 위기,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다. 만약 양국 간 협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양국 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일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틀 속에서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본의 ‘불안’과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일협력은 종종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같이 한미일 협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3국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능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일이 미국의 중재 없이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없고, 상호소통이 어려운 국가로 남는다면, 진정한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미중전략경쟁 하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일이 각각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로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정책연구센터장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